1.21 전국승려대회

5000여 스님의 준엄한 경책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으로 발발된 8.27범불교도대회

위법망구 정신으로 佛法 수호 나선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1월 21일 오후2시 5천여 스님들
한국불교 총본산 조계사서 결집
종교 편향 · 불교왜곡 종식 촉구

파사현정으로 헌법 정신 수호
종교갈등 근본적 해결 촉구도
종교화합·국민통합 위한 결단

1월 21일 오후 2시, 한국불교 총본산 조계사에 전국 5000여 스님들이 결집한다. 종교편향 · 불교왜곡 저지와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는 지난 수십년간 반복돼 온 종교편향 · 불교왜곡을 이번에야말로 뿌리 뽑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출이다. 공공영역에서 지속되는 종교에 의한 갈등 요인을 경책하고 규탄하는 뼈아픈 죽비이자,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불법을 수호하는 방파제가 되겠다는 발원의 장이기도 하다. 때문에 전국승려대회는 향후 우리사회 종교화합과 국민통합, 불법수호를 위한 역사적인 법석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전국 사찰과 포교현장에서 수행과 포교, 전법에 임하던 스님들의 대대적인 결집 예고에 불교계 안팎의 시각도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불교계는 종교편향 사안이 발생하면 성명서 발표와 사과 촉구 등의 단발성의 의사표명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불교계의 문제제기에 사안이 개선되는 경우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주최 측의 사과 정도로 무마되거나 흐지부지 여론에서 잊혀 지곤 했다.

그러나 이번 승려대회는 그 결을 달리하는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단순히 지난해 불거진 몇 가지 사안에 대한 규탄을 넘어, 우리사회 공적 영역에서 직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종교편향과 불교왜곡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사회적 인식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계기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화재관람료 폄훼 발언,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럴 활성화 캠페인'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화재관람료 폄훼 발언 역시 첫 시발점인 지난해 10월 5일 국정감사 시점부터 해를 넘어 지속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의 문화재관람료 폄훼 발언이 전통문화 몰이해에서 비롯됐으며 이에 따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전국 사찰에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 대한 규탄입장을 담은 현수막을 게재하고,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거듭된 사과에도 당사자 출당조치를 요구하는 강도 높은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적 행보라는 시각도 있지만, "더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여론이 응집한 결과라는 게 불교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문화재관람료 문제는 오랜 세월 불교계를 괴롭혀 온 현안이기 때문이다.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합법적인 징수임은 차치하고라도, 그간 국가정책의 일방적 변화로 전통사찰이 국립공원에 강제편입된 상처와 더불어, 그에 따른 부작용을 고스란히 불교계가 떠안은 사안이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사실을 왜곡한 발언을 쏟아내 국민들에게 편견과 오해를 전했고, 사과는 커녕 며칠 뒤 국정감사에서 재차 같은 입장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럴 활성화 사업' 역시 크리스마스 주간을 맞아 캐럴을 활용해 국민들을 위로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국가기관이 직접 홍보에 나서는 등 도넘은 행보로 "종교편향 행정"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은 사례다.

여기에 올해 정부예산안에서 전통문화 보존 · 전승을 위한 추가예산이 일부 삭감되면서 정부의 전통문화 홀대 여론까지 더해졌고, 수년전부터 논란이 됐던 주어사 · 천진암의 가톨릭 역사 덮어씌우기 문제, 국공립합창단의 종교편향성 문제도 재조명됐다. 주어사 · 천진암의 가톨릭성지화는 이미 수년전 지역 불교계의 문제제기에 직면한 바 있지만 결국 강행됐고, 국공립합창단의 기독교 편향성 문제 역시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로 인식됐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불교계 공분은 몇 가지 사안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오랜 세월 수없이 반복돼 온 종교편향, 불교홀대 사건들로 누적된 결과물이며, 전국승려대회는 이로 인해 더 이상의 사회적 갈등이 확산돼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스님들의 실천행이라는 평가다.

전국승려대회는 그야말로 이례적인 법석이다. 전국 사찰과 선원, 포교현장에서 수행과 전법, 포교에 매진하던 스님들의 결집이자 범불교 · 범종단적 차원의 행보다.

이날 현장에는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주지와 말사 주지스님 등 소임자 스님, 중앙종회의원, 전국선원수좌회,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과 각급 교육기관 학인 스님, 또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소속된 30여 종단 스님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승려대회를 봉행하기 위한 위원회 조직도 불교지도자급 큰스님들로 대거 포진됐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증명으로 하고, 자문위원은 원로회의 의장과 원로의원, 명예원로, 전계대화상, 총림 방장으로 구성됐으며 지도위원은 현직 대종사와 대종사급 스님이 맡았다. 봉행위원장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며 이를 중심으로 종앙종회의장과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전국비구니회장이 부위원장을 담당한다. 상임봉행위원으로 법계위원장, 법규위원장, 중앙승가대 총장, 동국대 이사장, 역대 종회의장 · 호계원장 · 교육원장 · 포교원장,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까지 한축을 담당한다.

때문에 승려대회는 불자들의 여론을 인지한 스님들이 먼저 결집하고 움직여 우리사회에 묵직한 화두를 던진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불교계는 승려대회 이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경우, 2월경 전국 사부대중이 결집한 범불교도대회를 예고하고 있다.

전국승려대회는 조계사 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당일 오후 2시, 전국 사찰서의 타종으로 종교차별과 불교폄훼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불교계의 굳건한 의지를 국민 모두에게 알릴 방침이다.

승려대회는 1부와 2부로 진행된다. 1부는 고불문, 봉행사, 종정 진제 스님 유시, 대회연설, 결의문, 국민에게 드리는 글, 발원문 낭독 등 승려대회의 취지와 결의를 모으는 법석으로 열린다. 이어 2부는 청와대와 국회, 더불어민주당사를 향한 차량 시위 등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승려대회는 시작일 뿐이다. 오랜세월 우리사회에 잠재돼 온 뿌리깊은 갈등의 씨앗을 이제는 뿌리 뽑아 진정한 화합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 사회적 인식 변화를 기반으로 종교감수성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차별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서의 법제화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1959년 12월 23일 기독교부산방송 개국

역대 정부 주요 종교편향 사례

기독교 국가 수립 위한 공공 선교

미군정 · 이승만 정부(1945~1960)

한국사회에서 종교차별은 미군정 시기에 그 확고한 씨앗이 뿌려졌다. 미군정은 미국에서 방송선교의 폭발적 성공 경험을 한국에 이식하기 위해 해방 직후부터 방송 선교를 노골적으로 추진했다. 공영방송이던 서울방송(KBS 전신)을 통해 1945년 10월 2일부터 일요일마다 기독교 선교방송을 내보내는 등 자국에서도 하기 힘든 기독교 우대정책을 행했다. 이승만 정부에서도 일요일 선교방송은 계속 이어졌다.

또한 1954년 한국 최초 민간방송인 기독교방송국(CBS)과 1956년 극동방송국 설립에 특혜를 줘 선교 인프라 구축에 큰 역할을 했다. 한국 최초이자 국내 유일의 민간방송이었던 기독교방송은 1960년대 초반 이미 대구, 부산, 광주, 전북 등 전국 방송망을 갖추며 수십 년간 종교방송 시장을 독점하고 국민들을 끌어 모았다. 반면 가톨릭 평화방송과 불교방송은 개신교보다 34년이나 늦은 1989년에야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얻을 수 있었다.

다수의 개신교 신문 허가도 줄을 이었는데 1945~1959년 개신교 신자가 발행한 신문은 28개에 달했다. 개신교 신자가 사주인 신문들의 개신교에 대한 긍정적 기사가 그렇지 않은 신문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